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

2020. 6.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1. 분과위원회 검토 사항

-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화 대법원규칙 개정시 관련 예규 개정안 검토

2. 개정안 vs. 제정안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의 의결에 따라,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부담화 하기 위한 대법원규칙 개정과 함께 필요한 예규의 개정안, 제정안을 검토함.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이하 ‘통번역 예규’라 한다)에서는 외국어 통역과 수어통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의 외국어 통역과 형사절차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이 존재함.
- 수어통역 비용 부담 문제는 외국어 통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형사절차 외의 민사, 가사, 행정소송절차, 비송절차 등 다양한 절차에서도 수어통역비용이 문제됨.
- 통번역 예규에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는 개정과 함께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이



함께 필요함.

■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 vs. 통번역 예규 개정안

● 통번역 예규 개정안

- 장점: 외국어 통역과 수어통역을 함께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통번역 예규의 틀을 유지하면서, 외국어 통역에 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수어통역에까지 확대하고, 형사절차 외의 민사, 가사, 행정소송절차나 비송절차 등에서의 수어통역문제도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임.
- 단점: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통역에 적용되는 규정들처럼 수어통역, 형사절차 외의 절차로 확장되지 못한 규정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앞서 언급한 외국어 통역, 형사절차 통역에 편중된 불균형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

- 장점: 수어통역을 기존의 통번역 예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규를 제정해 규율하므로 앞서 언급한 기존 통번역 예규의 외국어 통역, 형사절차에 편중된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청각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수 있음.
- 단점: 통번역 예규에서, 외국어 통역과 수어통역을 일원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분리하는 결정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그러한 분리가 수어통역을 오히려 더 소홀히 취급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함.

● 사법정책분과위 의견 :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

- 제정안(사법정책분과위 의견) vs. 통번역 예규 개정안
- 방청인 수어통역 문제를 함께 해결할지(사법정책분과위 의견)
vs.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미룰지(이 경우 10월 임기 종료라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



< 목 차 >

I.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 검토의견

1. 배경
2. 구체적 조문안과 쟁점사항
3. 제외된 기존 통번역 예규 조항들 중 추후에 보완 개정이 필요한 부분

II. 구체적인 통번역 예규 개정안

1. 총칙
2. 제2장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3. 제3장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피고인을 위한 배려
4. 부칙: 시행일 명시

<첨부자료>

첨부 1.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양식

첨부 2. 수어통역인 경력카드 양식

첨부 3.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양식

첨부 4. 기존 통번역 예규/개정안/제정안 조문대조표

첨부 5.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



I.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

1. 논의배경

- 당초 사법정책분과위 장애소위 발제담당자(차성안 위원)이 통번역 예규 개정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에서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함.
- 위 제정안에 대하여 발제담당자가 검토 의견을 제시한 후 이에 관한 사법정책분과위 장애소위 토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최종적인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을 제시함.

2. 구체적 조문안과 쟁점사항

가. 제1조 ~ 제3조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의 절차 및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소송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소송당사자·증인·감정인 등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 집행·비송·회생·파산절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심리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는 형사절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어통역) ① 수어통역은 ~~소송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수어통역을 원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방청인은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은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위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어통역인에게 제11, 12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전산양식 B****]에 의한다.



▣ 방청인 수어통역 문제: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제3조(수어통역)

- 제2조(적용범위)에 방청인을 추가하고, 다만 제3조 제1항에서 방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전에 신청하도록 함. 다만 7일 경과 후 신청시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함.
- 제2조 제1항의 인적 적용범위를 규정한 내용과 제3조 제1항의 수어통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중복된 면이 있어 제3조 제1항에서는 인적 적용범위를 확인한 내용을 삭제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

- 1안: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화와 문제와 같이 해결[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사법정책분과위(장애소위)에서 구체적 개정안 검토·토론 마침]
- 2안: 연기하여 2020년 하반기 안건으로 추가회부(10월말 임기로 임기내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사법정책분과위 의견: 1안으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충분한 토론을 거친 예규안 마련됨(최근 재판부들은 방청인 수어통역 인정)
 - 위에 제시된 청각장애인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관련 예규안은 지난 1년간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사법정책분과위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안임. 의사결정을 미뤄서 불필요한 논의를 반복할 필요가 없음.
 - 논의 결과, 분쟁을 유발하기 좋은 애매모호한 개념인 이해관계 유무를 따지지 않되, 사전신청 절차를 요구하여 원활한 재판진행과의 조화를 꾀하는 안으로 의견이 수렴됨.
 - 실질적으로도 최근의 재판부들은 방청인 수어통역을 인정하고 있음(아래의 청각장애인 방청문제 논의연혁 중 최근 사례들 참조).
- 방청인 수어통역은 개정 법령을 통한 위임 없이도 사법행정 차원에서 해결가능
 - 기존에도 방청인 수어통역 문제는 별도의 법령상 위임 근거규정 없이 재판장의 소송지휘로 이루어졌고,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일명 도가니



사건) 사건에서의 청각장애인 방청이 문제되자 법원 내규로서 방청인 수어통역 절차를 정함.

- 방청인 수어통역을 인정하는 예규는,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심리의 공개주의 원칙,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법접근성 보장규정에 따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입법예고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화를 위한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도 전혀 상충되지 않음.

● 청각장애인 방청인 문제는 13년 전에 제기된 해묵은 이슈임.

- 오랫동안 이 문제가 전체 법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방청인 수어통역 여부와 범위, 방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됨.
-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문제 해결과 함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슈인 청각장애인 방청인 수어통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인권보장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

[청각장애인 방청문제 논의 연혁]

- 2005. 12. 15. 광주지법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1차 공판시 수어통역사 배치 거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진정¹⁾
- 2006. 7. 10.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방청인 수화통역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²⁾
- 2007. 12. 23. 광주지법 형사2부 방청인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배치 거부 기사화³⁾
- 2007. 2. 14. 광주지법 청각장애인 법정방청 수화통역 내규 제정⁴⁾
- 2012. 4. 17. 광주지법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1심 3차 공판, 방청석용 수어통역사와 공판과정 수어통역사 2명이 배치되고, 모니터로 증인속기사 통한 문자통역 제공.⁵⁾
-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청각장애인 방청인이 갑작스럽게 법정에서 대동해온 수화통역인을 통한 수어통역 요청하여 거부됨.⁶⁾



- 2013. 7. 법원행정처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 청각장애인 방청인 수어통역 적극 고려 권장
- 2018. 11. 23. 서울중앙지법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에서 방청인 포함해 수어통역, 자막 동시제공⁷⁾

▣ 적용범위의 소송절차 한정 문제: 제2조 제2항

- 기존 통번역 예규는 적용되는 절차를 한정하지 않아 비송절차, 집행절차, 회생, 파산절차 등의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제정안은 소송절차로 한정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가사비송 사건이나 회생, 파산 사건에서의 수어통역은 이미 사례가 많이 존재함.
- 일단 거친 형태이기는 하나, 제2항의 “소송절차” 다음에 “, 집행·비송·회생·파산절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심리절차”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함. 시간이 촉박하여, 예시된 항목들의 적절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음. 그리고 법원의 분쟁 해결과 관련된 심리절차와 무관한 민원절차(?)의 경우와의 선을 그을 필요성을 고려해서, “심리절차”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검증이 필요함. 다른 대안적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 제2조 제2항 단서의 “다만 제18조는 형사절차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표현은 삭제함. 제18조의 내용 그 자체로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기 때문임.

▣ “심리절차”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은 없는지

- 법원의 일체의 모든 절차로 읽혀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은 없

1) 청각장애인, 법정서 수화통역사 요구, 매일경제 (2005. 12. 16.)

2) 농아인 재판방청, 문 활작, 웰페어뉴스(2020. 5. 21.)

3) ‘차라리 청각장애인 법정 출입을 막아라’, 광주지법 ‘방청 장애인에 수화통역말라’... 청각장애인들 인권위에 진정, 오마이뉴스 (2017. 1. 27.)

4) 청각장애인 법정방청 위한 수화통역 내규 제정-광주지법, 법률신문(2007. 2. 14.)

5) 성폭력 사건 공판 모니터링 자료-광주인화학교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 1심 3차공판

6) ‘도가니’ 법원, 수화통역 불허 논란, 국민일보(2012. 9. 4.)

7) “[소송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자막 동시제공”, 희망을 만드는 법 활동 소식(2018. 11. 23.)



는지 문제제기가 있었음.

- 앞서 소송절차나 비송절차 등 예시가 될 만한 절차를 명시하고 그에 이어서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심리절차”를 명시하였으므로, 그럴 우려가 작다는 의견이 제시됨. 서면심리 절차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수어통역 자체가 구두 음성 심리절차에서의 통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절차에 확대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옴.
- 특수한 예외적 상황의 경우에는, 미리 그걸 예상해서 막기 보다는 일단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실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례법리를 통한 해결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위와 같은 토론을 거쳐 “심리절차”라는 표현은 유지하기로 함.

▣ 제3조 제3항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 전산양식 개발 문제

- 개정된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별지 2 양식 최종안 활용[첨부 1]

나. 제4조 ~ 제5조

▣ 제4조 제1항 수어통역인 후보자 경력카드 전산양식 개발[첨부 2 참조]

제4조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 ① 각급 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2인 이상의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어통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제5조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

- ① 각급법원은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
 2.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수어통역인으로 지정될



만한 수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은 선정된 수어통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 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제6조

제6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6.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7.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8. 통역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109.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6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제1호를 삭제하고, 2, 3, 4호를 1, 2, 3호로 수정.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는 2018. 7. 2.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
- 피후견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자격증 관련 결격사유에서도 입법상 삭제하는 법개정이 다수 이뤄진 것 반영.

라. 제7조 ~ 제8조

제7조 (인증평가의 실시)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수어통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통역인의 지정 등)

- ① 참여사무관등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수어통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 수어통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 과 같이 한다.
- ③ 수어통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 제2항 수어통역인 지정결정의 양식, 수어통역인 신문조서의 양식

- 수어통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민사, 형사로 나누어 작성해봄[첨부 3]
- 수어통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기존 통번역예규 제7조의4 제2항의 통역·번역인 신문조서 전산양식 B1263이 양식 찾는 재판지원시스템상 열리지 않아서, 작성하지 못함. 행정처 전산정보국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양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후속작업 가능함. 다만 수어통역인 신문조서 양식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듯.



마. 제9조 ~ 제10조

제9조 (수어통역인 지정의 취소)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어통역이 재판의 적정성,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어통역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수어통역인에게 제6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수어통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②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지정의 취소사실을 수어통역인에게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①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수어통역인 후보자가 통역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 제10조(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기존 통번역 예규에서 제8조(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는 외국인 피고 사건에 한정된 조항이었음. 외국어의 경우 수백개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통번역인이 없는 외국어를 상정하기가 쉬우나, 수어통역은 그렇지 않음.
- 다만 수어의 경우에도 수어통역을 요하는 자가 어떤 농인사회에만 특유한 수어(자연수화 형태의)를 구사하거나, 혹은 외국인 청각장애인이 미국수화 등을 구사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 일단 제정안 제10조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냄.

바. 제11조 ~ 제13조

제11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수어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어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수어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수어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2. 수어통역인이 출석하여 수어통역이 행하여진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다. 통역료

제12조 (수어통역료 산정 기준)

수어통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수어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수어통역의 난이도, 수어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수어통역의 수준, 제7조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수어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통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제13조(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

- 수어통역에 있어 배려할 사항은 간결한 문장과 통역가능한 표현 사용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음. 수어통역사의 위치도 중요하고, 기타 장애인 기존 장애인사법지원가이드라인과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의 부록으로 별도로 제공되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에 관한 주의사항(권형관 판사님이 담당해 작성하신 부분임)에서 뽑아내어 규범화할 내용들이 많이 있음.
- 일단 시간이 촉박해서,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것으로 하였으나 만약 여유가 있다면 조항을 몇 개 더 늘려서 작성해 볼수도 있을 것임. 일단 분리된 통번역 예규 제정안을 만드는 것을 이번에 목표로 하고, **이후 추가 개정**



절차를 진행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 제14조

제14조 (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 등)

- ① 형사절차의 경우에서 참여사무관등은 수어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수어통역인에게 공소장부분을 송부하고, 소송관계인들로부터 기소요지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수어통역인에게 송부하여 수어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수어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다른 모든 소송절차에서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수어통역인에 필요한관련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수어통역인에게 송부하여 수어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 - 기존 통번역 예규 제4조 제3항 논의 포함

- 현행 통번역 예규의 제4조 3항에서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통역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부해 주는 것은 수어통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정안에서 빠짐. 현행 통번역 예규 제12조(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를 이용하여 만든 제정안 제14조(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첨부 2.에서 제14조 제1항 제1문으로 추가하는 안을 제안함. 제1항 제2문에 현행 통번역 예규 제12조의 내용을 살려 추가함. 결국 제1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인에 대한 사전 소송서류 송부를 규정함.
- 제2항에 제정안 제14조를 살리되, 형사절차 외의 모든 절차에 적용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수어통역이 필요한’ 소송서류를 ‘수어통역에 관련된’ 소송서류로 수정한 안을 제안함. 통상은 소송서류를 수어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에서의 의사소통을 수어통역하는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서류의 내용을 수어통역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임.
- 수어통역에 필요한 소송서류의 범위는 매우 유동적이라 재판장이나 실무관 등이 보낼 서류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 부분은 실무에서 경험의 축적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지 미리 예규로 정할 수 있는 부



분이 아님. 그리고 전자소송이 적용되는 경우 전자적 송부시스템을 통해 송달서류를 뽑으면 되고 실제 일일이 복사기로 복사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음.

아. 제15조

제15조 (재판과정의 녹화)

-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자를 위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소송당사자가 있는 사건의 심리 과정 중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② 제1항과 같이 영상녹화를 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 제15조(재판과정의 녹화)

- 제1항에서 재판과정의 녹화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여, 소송당사자가 아닌 증인 등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영상녹화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수어통역의 정확성 문제는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증인 등 다른 소송관계인의 경우에도 중요한 문제임.
- 영상녹화 범위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있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없애 그 문제를 해결함. 그 경우 이론적으로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이뤄지는 경우를 포섭하는 문제가 있으나, 심리 과정 중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 필요에 따른 영상녹화를 할지 여부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것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중 방청인을 뺀 표현인 “소송당사자·증인·감정인 등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을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나 너무 조항 표현이 길어지는 듯하여 채택하지 않음.
- 다만 영상녹화에 대한 신청권은 소송당사자에게 남겨둠. 신청권을 소송관계인에게 확장하는 문제도 고려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음. 증인 등 소송



관계인이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당사자가 신청하여 영상녹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영상녹화물의 원칙적 보관기한을, 기존 통번역 예규 제13조 제2항의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늘림. 현재 개선된 전산시스템상 보관이 용이하므로 찬성함. 형사와 달리 민사 등의 경우 취하, 화해 등으로 종국되는 경우가 많아 “당해 사건이 종국될 때까지”, “당해 소송절차(상소된 경우 상소심 절차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판결확정시를 다른 형태의 종국시점으로 유추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대로 놔둠.

자. 제16조

제16조 (수어통역에 대한 이의)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수어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한다.
2. 피신문자가 법정에 없는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어통역인에게 영상녹화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어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어통역에 대한 이의)

- 제16조 제1항은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하는 주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각장애가 없는 반대소송당사자가 제기할 수도 있고, 증인 등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수어통역이 이뤄지는 경우 양 소송당사자가 장애가 없을 수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듣거나 말



하는 데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함.

-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증인 등 소송관계인까지 확장할 지가 문제되는데 부정하는 입장을 취함. 앞서 영상녹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소송관계인이 수어통역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연스레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이해관계를 가진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이의를 자연스레 신청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기존 통번역 예규 제14조 제3항은 통역이 녹음된 경우, 통역인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하는 절차로서 영상녹화가 이뤄진 경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정안에서 누락되어 있음. 제2항을 수정하여 넣어 문제를 해결함.

차. 제17조

제17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수어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수어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 ②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기존 통번역 예규상 존재하던 예시는 삭제>

■ 제17조(판결이유의 설명 등)

- 기존 통번역 예규의 경우 형사절차에 한정된 조항이어서 이해가 어려운 판결내용, 특히 주문에 관한 쉬운 설명의 예로 제시된 내용(집행유예 판결, 불법체류 중인 자에 대한 집행유예 등)이 삭제됨.
- 민사, 행정, 가사, 회생, 파산 등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 점이 있어 보임. 이 부분을 절차별로 예시를 만들지, 그냥 삭제하고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관련 내용을 넣을지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카. 제18조 및 부칙

제18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① 형사절차에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을 의뢰하여 그 통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에 대하여 제11, 12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수어통역인에게 통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등이나 기타 필요사항이 있으면 그에 관한 부칙 추가요

▣ 제18조(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 행정, 가사 등의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 소송구조가 이뤄진 경우 등의 경우 변호사와의 변론 준비 등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수어통역 비용으로 소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더 근본적으로는, 사선변호인이 형사절차에서 선임되거나, 민사 등 절차에서 자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상담과정에서의 수어통역 비용 문제도 발생함.
-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3. 제외된 기존 통번역 예규 조항들 중 추후에 보완 개정이 필요한 부분

▣ 다만 아래 사항들은 이번 예규 개정에서 반영하기는 어렵고 장기과제로 나중에 추가개정 필요성 여부를 논할 때 다루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제2조(사건의 접수)



- 외국인 피고인 형사 사건의 국적 입력 시스템 관련해서,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입력하는 란을 신설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음. 다만 실제 시스템이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함.
 - 기존의 외국인 국적 입력시스템은 형사 사건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장애인 사법지원과 관련된 입력 항목 개발시에는 민사, 형사를 가리지 말고 입력이 가능한 것이 나을 것임.
 - 장애에 관한 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으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런 지적은 실제 수어통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행정적 목적의 장애 정보 수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제정 후 추가 연구 검토를 거쳐 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제3조(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제5조(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수어통역 영상 자료를 안내문으로 교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제5조의 재판에 관한 다른 안내서들도 마찬가지로 수어통역 영상자료로 만들어 송부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학농인 등이 아직까지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
 - 음성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굳이 수어통역 영상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함.
 - 형사절차에 한정되어서만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도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그 경우 민사, 행정, 가사까지 확대되면 수어통역 영상 송부부담이 훨씬 더 커짐. 물론 기존 통번역 예규에서 민사나 가사등과 달리 형사절차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런 재판에 관한 안내문, 안내서 송부를



강조한 것은 형사절차가 외국인 피고인의 기본권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특수성을 반영한 면이 있음.

- 다만 법률수어용역이 진행 중이나 위와 같은 영상자료가 용역결과로서 나올지가 불확실함. 실제 그런 영상자료가 먼저 준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남겨둠. 추후 보완하여 개정요.

II. 통번역 예규 개정안

※ 사법정책분과위 장애소위 의견은 제정안으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졌으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추가적인 선택 옵션을 필요로 할 수 있어 당초 작성했던 개정안도 함께 자료로 제공함.

1. 총칙

가. 제1조(목적): 청각장애인 피고인 절차상 권리 보호 목적 추가

현행 규정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통역·번역인의 지정, 통역·번역의 절차 및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형사 피고인(이하 ‘외국인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u>외국어·수어통역(이하 ‘통역’이라 한다)</u> ·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통역·번역인의 지정, 통역·번역의 절차 및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형사 피고인(이하 ‘외국인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u>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u> 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에서 외국인 피고인 외에 청각장애, 즉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수어통역 절차상 권리 보장의 목적도 있음을 명확히 함.



- 형사소송법 제181조의 제목에서는 ‘농아자’, 본문에서는 ‘농자 또는 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43조에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잘 쓰이지 않은 한자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한글 표현인 민사소송법상 표현을 채택함. 다만 형사소송법상 “**농자 또는 아자(이하 ‘농아자’라 한다) 피고인**”이라고 개정해도 규율상 실질적 차이는 없음.

나. 총칙 중 개정하지 않는 조항

- 아래의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5조는 청각장애인 피고인을 포함할 필연적 이유가 없어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

제2조 (사건의 접수)

제3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제4조 (공소장의 번역 등)

제5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2. 제2장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가. 제6조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현행 규정	개정안
제6조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u>농아자의 수화</u> 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	제6조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u>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어</u> 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를 제출받아, 그 명



(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	--

나. 제2장 중 개정하지 않는 부분

- 아래의 제2장 중 제7 내지 10조는 수어통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족하고 수어통역에 특유한 개정 소요가 없어 개정하지 않음.

제7조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
제7조의2 (결격사유)
제7조의3 (인증평가의 실시)
제7조의4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제7조의5 (통역·번역인 지정의 취소)
제8조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제9조 (통역·번역 수당 등 지급)
제10조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

- 다만 제7조의4 제2항의 “통역·번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인 “[전산양식 B2600]”의 이유 예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를 추가하는 전산양식 개정을 제안함.

현행 양식 중 이유 부분	개정 양식 중 이유 부분
이 유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므로(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80(제182조)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므로(<u>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어 수어통역이 필요하므로</u> ,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80(<u>제181조</u> , 제182조)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다. 제10조의2: 수어통역 비용 전체 국고부담화에 관한 조항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없음.	<p><u>제10조의2 (수어통역)</u></p> <p>① 수어통역은 소송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수어통역을 원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방청인은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은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위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수어통역인에게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체적 지급절차는 형사소송에서의 지급절차에 따른다.</p> <p>③ 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전산양식 B****]에 의한다.</p>

■ 제1항

- 수어통역이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만 방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과 유사한 면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7일의 기한을 제시함. 다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제공이 가능하면 제공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함. 방청인은 소송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관계인처럼 소송절차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리 신청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수어통역 필요성 여부



를 확인하기 힘들어서 신청기한을 특별히 규정함.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관한 형사 사건(광주지방법원),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청인 수어통역이 분쟁이 된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여전히 실무상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한 기준을 주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지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미경 위원께서 주문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이참에 함께 간단한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제2항

- 수어통역 비용이 절차를 가리지 않고 국고부담으로 처리되고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함.
-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지급절차를 헛갈려 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국고로 부담하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 비용 지급절차에 의하도록 안내하는 규정을 둬.

■ 제3항

-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가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에 포함되어 있고, 법원 내부의 전산시스템과 법원 외부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 시스템상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정작 전산양식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산양식으로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 신설을 제안함.
- 구체적 양식 내용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 양식에 의하면 됨.

3. 제3장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피고인을 위한 배려

가. 제11조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을 위한 배려), 제12조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



- 통역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수어통역인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개정하지 아니함.

나. 제13조 (공판과정의 녹음): 수어통역의 경우에 녹화의 특칙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p>제13조 (공판과정의 녹음)</p> <p>① 참여사무관등은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심리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과 같이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물은 형사소송규칙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p>	<p>제13조 (공판과정의 녹음·<u>녹화</u>)</p> <p>① 참여사무관등은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심리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p> <p>② <u>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 사건의 경우에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녹음 대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u></p> <p>③ 제1, 2항과 같이 녹음 <u>또는 영상녹화</u>를 한 경우 그 녹음물 <u>또는 영상녹화물</u>은 형사소송규칙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녹음물 <u>또는 영상녹화물</u>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p>

■ 제2항

- 청각장애인 피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녹음이 아니라 녹화가 필요한 것을 반영하여 별도의 규정을 둠.
- 다만 수어통역 영상녹화의 경우 재량이 없는 형태의 의무적 녹화가 아닌 그 실시 여부를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판단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함. 개별 법원, 법정의 설비사정에 따라 그 녹화의 용이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함.
- 실제 녹화 사례들을 통하여 외국인 피고인 사건처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피고인 통역사건처럼 수어통역 사건 녹화를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임.

■ 제3항

- 영상녹화, 영상녹화물인 경우를 추가함.

다. 제14조 (통역에 대한 이의)

현행 규정	개정안
<p>제14조 (통역에 대한 이의)</p> <p>① 외국인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하고,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p>	<p>제14조 (통역에 대한 이의)</p> <p>① 외국인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하고,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제1, 2항에 따르되, 다만 제1항의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의 절차와 제2항의 절차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p>

■ 제3항

-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통역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되,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역인에게 보내서 진행하는 절차나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명시함.

라. 제15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 통역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수어통역인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개정하지 아니함.

마. 제16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번역): 청각장애인 피고인 부분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p>제16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번역)</p> <p>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9조와 제10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번역인에게 통역·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p>	<p>제16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번역)</p> <p>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9조와 제10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번역인에게 통역·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p> <p>③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을 의뢰한 경우에도 제1, 2항과 같다.</p>

■ 제3항

-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을 의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역료 지급, 증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4. 부칙: 시행일 명시

부 칙(2020.O.OO. 제OOOO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전화	
	주소		이메일	
1. 신청인의 장애 유형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input type="checkbox"/> 내부기관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신청인의 장애 정도				
가) 장애 유형 :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장애 유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구체적인 장애 정도에 관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사항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input type="checkbox"/>활동(이동)보조인력 <input type="checkbox"/>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input type="checkbox"/>수어통역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input type="checkbox"/>의사소통 보조인력 <input type="checkbox"/>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 가능 전자과일 <input type="checkbox"/>문자통역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input type="checkbox"/>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및 기구 <input type="checkbox"/>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input type="checkbox"/>휠체어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input type="checkbox"/>확대경(확대독서기) <input type="checkbox"/>보청기 또는 음성증폭기 </div>				
※ 위에 기재된 사항 외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법원의 물적·인적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 style="margin-top: 20px;">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 . . .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지방법원 제○부(단독) 귀중 </div>				



※ 본인의 장애 상태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앞면의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중 본인의 장애 유형과 관계있는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관련]

가. 시각장애로 인해 글자를 읽거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서 보거나 돋보기를 이용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는 () 이다.

① 법원(10p) ② 법원(20p)

③ 법원(30p) ④ 법원(40p)

2) 돋보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일반적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확대인쇄물은 읽을 수 있다.()

3)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5) 시각장애로 인해 법원 청사 안팎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관련]

나. 청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상대화가 잘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2) 일상적인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3)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수어를 이해할 수 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구화를 배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4)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컴퓨터 자판을 쉽게 다룰 수 있다.()
- 5) 수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글자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모두 필요하다.()
-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관련]

다. 몸이 불편하여 재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
- 2)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보조기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 3)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도와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도움의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는 있지만 굴릴 힘이 없어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
- 4)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재판받기가 어려우므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몸 상태를 쓰시기 바랍니다).
- 5) 몸이 불편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조인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보조인은 누구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타]

라.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 재판을 받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원에 바라는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에 쓰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수어통역인 경력카드 양식 (전산양식[B0000(기존 양식분류번호는 B2610)])

수어통역인 경력카드

2020. . . 현재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자 택 :					
	TEL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FAX : CELL :	
소 속			현 기관 근무년수	년 개월 (. . . 지정)		
수어통역 분야 (구체적 기재)	(※ 난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사건의 경우 한국수어 외에 중국수어, 미국수어 등을 구사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시를 나중에 실제 양식 마련시에는 추가해 줄 필요가 있음)					
자 격			자격취득 년월일			
활동 희망 지역) (2군데 이상 ○ 표시)	서울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 지원	대전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 지원	대구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 지원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 지원	광주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 지원	
최종 학력	(졸업 · 수료 · 중퇴)					
주요 경력						
법원 수어통역인 경력						
주요 저서, 논문						
소송 사건 당사자 경력						
형사처벌받은 경력						
(특기사항)						

8) 활동 희망 지역에 ○표 하는 것은 해당 고등법원과 그 고등법원 관내 각 본원 및 지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임. 통·번역인에게는 통역료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여비, 일당 및 숙박료가 지급될 수 있음. 단,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기준으로 함



[첨부 3]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양식

○ ○ 법 원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사 건 20 가
원 고
피 고
통 역 인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을 수어통역인으로 지정한다.

이 유

※ 기존 B2600 양식은 형사만 존재. 민사, 가사 등에서 사용가능한 양식과 형사 사용 양식 2개를 하나의 양식번호 안에 넣어두는 방식을 제안한

1안 :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안 : 이 사건의 원고(피고, 증인, 방청인, 기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자의 자격 표시) 000(가명을 사용하는 증인이나 방청인 등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름 생략 가능)와의 의사소통에 수어통역이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안: 이유 기재하지 않는 방안. 실무상 이유를 삭제하고 주문만으로 통역인 지정결정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됨.

20 . . .

판사 ○ ○ ○ ①



○ ○ 법 원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사 건 20 고
피 고 인
통 역 인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을 수어통역인으로 지정한다.

이 유

1안 :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안 : 이 사건의 피고인(증인, 방청인, 기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자의 자격 표시) 000 (가명을 사용하는 증인이나 방청인 등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름 생략 가능)와의 의사소통에 수어통역이 필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안: 이유 기재하지 않는 방안. 실무상 이유를 삭제하고 주문만으로 통역인 지정결정을 내린 사례도 발견됨.

20 . . .

판사 ○ ○ ○ ①



[첨부 4] 기존 통번역 예규/개정안/제정안 조문대조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부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장 표제 삭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통역·번역인의 지정, 통역·번역의 절차 및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형사 피고인(이하 ‘외국인 피고인’ 이라고 한다)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u>외국어·수어통역(이하 ‘통역’ 이라 한다)</u> ·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통역·번역인의 지정, 통역·번역의 절차 및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형사 피고인(이하 ‘외국인 피고인’ 이라고 한다)과 <u>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u> 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u>이 예규는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의 절차 및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소송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 (사건의 접수) 외국인 피고인 형사사건을 접수한 접수사무관 등은 반드시 그 국적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제2조 (사건의 접수) 외국인 피고인 형사사건을 접수한 접수사무관 등은 반드시 그 국적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삭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한다.	한다.	
제3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문을 대기하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그 피의자가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B1512] 을 교부한다.	제3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문을 대기하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그 피의자가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B1512] 을 교부한다.	<삭제>
제4조 (공소장의 번역 등) ①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송부하고,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제4조 (공소장의 번역 등) ①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송부하고,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삭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에게 공소장 번역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번역인을 지정하여 공소장을 번역하게 한다.</p> <p>③ 참여사무관등은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통역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부하여 주어야 한다.</p>	<p>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에게 공소장 번역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번역인을 지정하여 공소장을 번역하게 한다.</p> <p>③ 참여사무관등은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통역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부하여 주어야 한다.</p>	
<p>제5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p> <p>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제1심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과 함께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 [전산양식 B2102] ,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전산양식 B2103] 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2104] 를</p>	<p>제5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p> <p>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제1심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과 함께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 [전산양식 B2102] ,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전산양식 B2103] 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2104] 를</p>	<p><삭제></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송부한다.	송부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소송당사자· 증인·감정인 등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 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 애가 있을 때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 집행·비송·회생· 파산절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 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심리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는 형사절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어통역) ① 수어통역은 소송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수어통역을 원하는 자의 신청 에 따라 실시한다. 방청인은 7일 전까지 신청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하여야 하나, 법원은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위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수어통역인에게 제11, 12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전산양식 B****]에 의한다.</p>
제2장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제2장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장 표제 삭제>
<p>제6조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p> <p>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p>	<p>제6조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p> <p>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p>	<p>제4조 (<u>수어통역인</u> 후보자 명단의 작성)</p> <p>① 각급 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2인 이상의 <u>수어통역인</u>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u>수어통역인</u>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 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p>	<p>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u>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어</u>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p>	<p>력카드 [전산양식 B***]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법원행정처장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어통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p>
<p>제7조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p> <p>① 각급법원은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p>	<p>제7조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p> <p>① 각급법원은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p>	<p>제5조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p> <p>① 각급법원은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 2.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통역·번역인으로 지정될 만한 외국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p>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 2.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통역·번역인으로 지정될 만한 외국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p>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 2.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수어통역인으로 지정될 만한 수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p> <p>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각급법원은 선정된 통역인·번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번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통역·번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p> <p>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각급법원은 선정된 통역인·번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번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통역·번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p> <p>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각급법원은 선정된 수어통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제7조의2 (결격사유)	제7조의2 (결격사유)	제6조 (결격사유)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9. 통역·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p> <p>10.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p> <p>②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p> <p>③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p>	<p>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9. 통역·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p> <p>10.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p> <p>②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p> <p>③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p>	<p>76.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87.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98. 통역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p> <p>109.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p> <p>②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p> <p>③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상의 장애로 통역·번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통역·번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상의 장애로 통역·번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통역·번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p>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p>제7조의3 (인증평가의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p>제7조의3 (인증평가의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p>제7조 (인증평가의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수어통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의4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① 참여사무관등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② 통역·번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2600], 통역·번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 과 같이 한다. ③ 통역·번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4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 ① 참여사무관등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② 통역·번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2600], 통역·번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 과 같이 한다. ③ 통역·번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통역인의 지정 등) ① 참여사무관등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② 수어통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 수어통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 과 같이 한다. ③ 수어통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5 (통역·번역인 지정의 취소)	제7조의5 (통역·번역인 지정의 취소)	제9조 (수어통역인 지정의 취소)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역·번역이 재판의 적정성,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통역·번역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통역·번역인에게 제7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통역·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p>②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지정의 취소사실을 통역·번역인에게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역·번역이 재판의 적정성,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통역·번역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통역·번역인에게 제7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통역·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p>②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지정의 취소사실을 통역·번역인에게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어통역이 재판의 적정성,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어통역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수어통역인에게 제6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수어통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p>②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지정의 취소사실을 수어통역인에게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제8조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p> <p>①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통역·번역인 후보자가 통역·번역할 수 없는 외국인 피고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제1항에 기재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인이나 해당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p>	<p>제8조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p> <p>①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통역·번역인 후보자가 통역·번역할 수 없는 외국인 피고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제1항에 기재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인이나 해당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p>	<p>제10조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p> <p>①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수어통역인 후보자가 통역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p>
제9조 (통역·번역 수당 등 지급)	제9조 (통역·번역 수당 등 지급)	제11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① 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1.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p> <p>가. 여비 및 숙박료</p> <p>나. 일당</p> <p>2.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p> <p>가. 여비 및 숙박료</p> <p>나. 일당</p> <p>다. 통역료</p> <p>② 번역인에 대하여는 그 번역이 종료되었을 때 번역료를 지급한다.</p>	<p>① 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1.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p> <p>가. 여비 및 숙박료</p> <p>나. 일당</p> <p>2.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p> <p>가. 여비 및 숙박료</p> <p>나. 일당</p> <p>다. 통역료</p> <p>② 번역인에 대하여는 그 번역이 종료되었을 때 번역료를 지급한다.</p>	<p>수어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1. 수어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수어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수어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p> <p>가. 여비 및 숙박료</p> <p>나. 일당</p> <p>2. 수어통역인이 출석하여 수어통역이 행하여진 경우</p> <p>가. 여비 및 숙박료</p> <p>나. 일당</p> <p>다. 통역료</p> <p><삭제></p>
<p>제10조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p> <p>통역·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번역료는 다</p>	<p>제10조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p> <p>통역·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번역료는 다</p>	<p>제12조 (수어통역료 산정 기준)</p> <p>수어통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료는 다음의 기준</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p> <p>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p>	<p>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p> <p>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p>	<p>에 따라 산정한다.</p> <p>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수어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p> <p><삭제></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p> <p>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제7조의3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p> <p>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 로 정할 수 있다.</p>	<p>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p> <p>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제7조의3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p> <p>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 로 정할 수 있다.</p>	<p>2. 재판장은 <u>수어통역</u>의 난이도, <u>수어통역</u>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u>수어통역</u>의 수준, <u>제7조</u> 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 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p> <p>3.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 비, 일당, 통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 할 수 있다.</p>
	<p><u>제10조의2조 (수어통역)</u></p> <p>① 수어통역은 소송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p>	<p>비고) 유사 취지 규정을 제3조에 둠</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u>로 또는 수어통역을 원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방청인은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은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위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u></p> <p><u>② 수어통역인에게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체적 지급절차는 형사소송에서의 지급절차에 따른다.</u></p> <p><u>③ 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전산양식 B****]에 의한다.</u></p>	
제3장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피고인을 위한 배려	제3장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피고인을 위한 배려	<장 표제 삭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제11조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을 위한 배려)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번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을 위한 배려)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번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13조 (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 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수어통역 이 되 도록 간결한 문장과 통역 가능한 표현을 사용 하도록 한다.
제12조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기소요 지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 항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통 역인에게 송부하여 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기소요 지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 항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통 역인에게 송부하여 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 등) ① <u>형사절차의 경우에서</u> 참여사무관등은 수어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u>수어통역인</u> 에게 공소장부분을 송부하고, 소송관계인들로부터 기소요지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이 기일 전 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u>수어통역인</u> 에게 송 부하여 <u>수어통역인</u> 으로 하여금 미리 <u>수어통역</u> 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u>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다른 모든</u>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u>소송절차에서</u>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u>수어통역어에 필요한</u>관련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u>수어통역인</u>에게 송부하여 <u>수어통역인</u>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3조 (공판과정의 녹음)</p> <p>① 참여사무관등은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과 같이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물은 형사소송규칙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p>	<p>제13조 (공판과정의 녹음<u>녹화</u>)</p> <p>① 참여사무관등은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p> <p>② 법원은 <u>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 사건의 경우에</u>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녹음 대신 영상녹화를</p>	<p>제15조 (재판과정의 <u>녹화</u>)</p> <p>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자를 위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소송당사자가 있는 사건의 심리 과정 중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할 수 있다.</p> <p>② 제1항과 같이 영상녹화를 한 경우 그 영상</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p>	<p>할 수 있다.</p> <p>③ 제1, 2항과 같이 <u>녹음 또는 영상녹화</u>를 한 경우 그 <u>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u>은 형사소송 규칙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u>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u>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p>	<p><u>녹화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u></p>
<p>제14조 (통역에 대한 이의)</p> <p>① 외국인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하고,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4조 (통역에 대한 이의)</p> <p>① 외국인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하고,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6조 (수어통역에 대한 이의)</p> <p>① <u>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u></p> <p>1. <u>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수어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한다.</u></p> <p>2. <u>피신문자가 법정에 없는 때에는 영상녹</u></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u>③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제1, 2항에 따르되, 다만 제1항의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의 절차와 제2항의 절차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u>	<u>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어통역인에게 영상녹화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어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제15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제17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u>수어</u> 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u>수어</u> 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예시></p> <p>1. 구속중인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때 피고인은 오늘 석방되게 됩니다. 앞으로 ○년간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년 안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면 □년간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새롭게 범한 죄의 형도 살게 됩니다.</p> <p>2. 불법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p> <p>또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 후 곧 출입국관리국에서 피고인을 본국에 송환하는 절차가</p>	<p><예시></p> <p>1. 구속중인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때 피고인은 오늘 석방되게 됩니다. 앞으로 ○년간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년 안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면 □년간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새롭게 범한 죄의 형도 살게 됩니다.</p> <p>2. 불법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p> <p>또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 후 곧 출입국관리국에서 피고인을 본국에 송환하는 절차가</p>	<p><예시 삭제></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송환된 후 ○ 년간 대한민국에 돌아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 으면 이번의 형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송환된 후 ○ 년간 대한민국에 돌아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 으면 이번의 형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제16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번 역) 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 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 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 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 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9조와 제10조가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번역인	제16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번 역) 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 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 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 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 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9조와 제10조가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번역인	제18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 역) ① <u>형사절차에서는</u>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 이 지정한 수어 통역인에게 수어 통역을 의뢰하 여 그 통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 인한 통역시간에 대하여 제11, 12조 가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수어 통역인에 게 통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현행)	기존 예규에 수어 부분만 추가하는 방안 (차성안 위원 2020년 3월 수정안 기준) (*추가수정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행정처의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에 대한 차성안 위원의 수정안 (* 수정안 중 삭제 부분은 가운데줄로, 추가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p>에게 통역·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p>	<p>에게 통역·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p> <p>③ <u>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을 의뢰한 경우에도 제1, 2항과 같다.</u></p>	<p>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p>



[첨부 5]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가칭)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의 절차 및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소송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소송당사자·증인·감정인 등 기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 집행·비송·회생·파산절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심리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수어통역) ① 수어통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수어통역을 원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방청인은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은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위 기일 전까지 수어통역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어통역인에게 제11, 12조에 따라 지급하는 통역 수당 등은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전산양식 B****]에 의한다.

제4조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① 각급 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2인 이상의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어통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제5조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



① 각급법원은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
2.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수어통역인으로 지정될 만한 수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은 선정된 수어통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통역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9.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 ③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인증평가의 실시)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수어통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통역인의 지정 등)

- ① 참여사무관등은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수어통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 수어통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 과 같이 한다.
- ③ 수어통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수어통역인 지정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어통역이 재판의 적정성, 공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어통역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수어통역인에게 제6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수어통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지정의 취소사실을 수어통역인에게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①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수어통역인 후보자가 통역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제11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수어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어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수어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수어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 가. 여비 및 숙박료
 - 나. 일당
2. 수어통역인이 출석하여 수어통역이 행하여진 경우
 - 가. 여비 및 숙박료
 - 나. 일당
 - 다. 통역료

제12조 (수어통역료 산정 기준)



수어통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수어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수어통역의 난이도, 수어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수어통역의 수준, 제7조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수어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통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14조 (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 등)

- ① 형사절차에서 참여사무관등은 수어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수어통역인에게 공소장부분을 송부하고, 소송관계인들로부터 기소요지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수어통역인에게 송부하여 수어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수어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다른 모든 소송절차에서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수어통역에 관련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분을 수어통역인에게 송부하여 수어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재판과정의 녹화)

- ①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영상녹화를 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6조 (수어통역에 대한 이의)

① 소송당사자가 수어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수어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한다.
2. 피신문자가 법정에 없는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어통역인에게 영상녹화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어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수어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수어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예시 삭제>

제18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① 형사절차에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을 의뢰하여 그 통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에 대하여 제11, 12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수어통역인에게 통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등이나 기타 필요사항이 있으면 그에 관한 부칙 추가요